현안과제 2025(일반)-22

30th ANNIVERSARY
SINCE 1995

Issue Report

2025. 06. 09.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의 유형화와 타당성 검토

이 관 률
충남연구원 지역도시문화연구실 선임연구원
krlee@cni.re.kr

CONTENTS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생활인구의 개념과 부여군의 특징
3. 생활인구정책의 목록화와 대상사업의 선정
4.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의 유형화와 타당성 검토
5. 결론 및 개선방안

요 약

◦ 부여군은 48개의 생활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정주인구사업, 체류인구사업, 외국인사업, 정주+체류인구사업으로 유형화됨.

◦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은 정주인구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정주인구사업과 외국인사업은 청년 중심, 그 외 유형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민관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부여군은 청년, 여성,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생활인구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3~5일 단기체류와 30일 이상의 장기 체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기존 정주인구사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체류인구사업과 외국인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임.
- 셋째, 사후평가를 통해 반복되는 사업을 폐지하고, 체류인구사업, 외국인사업, 정주+체류인구사업의 목표 일치성이 제고되어야 함.
- 넷째, 아동과 청년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정주인구사업에서는 돌봄복지, 체류인구사업에서는 단기체류 및 교류강화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다섯째, 부여읍을 중심으로 생활인구정책을 추진하고, 관내 단체 및 대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0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서 생활인구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2025년 3월부터 생활인구 통계자료를 생성·제공하고 있음.

- 생활인구의 개념은 국가적 차원에서 총 인구의 감소, 그리고 지역적 차원에서 인구유치 경쟁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임.
-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통계가 생성·제공되고 있고, 주요 내용은 체류일수, 숙박인구,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 배수, 재방문율 등임(https://data.kostat.go.kr).

○ 한편 2025년 부여군의 비전은 “생활인구 10만 활력도시”로 설정하고 있음(부여군, 2025).

- 이를 위해 살기좋은 농촌, 문화관광특화, 도약하는 경제, 지속가능미래, 함께하는 복지, 지역맞춤발전의 6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인구의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정주인구 중심의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그리고 2024년 11월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방교부세 산정 시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하였고, 동 제도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임(행정안전부, 2024).

-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부여군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생활인구는 지방교부세를 증액할 수 있는 현실가능한 대안 중의 하나로 평가됨.
- 현재 부여군이 시행하고 있는 생활인구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함께 생활인구정책의 개선방안이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부여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인구정책을 유형화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있음. 이를 통해 향후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 부여군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관리카드 작성

- 부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인구정책을 목록화하기 위해서 2025년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부여군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였음.
- 사업관리카드는 2025년 부여군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생활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과 2025년 인구감소대응 실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등으로 총 80개로 구성됨.

○ 외부 평가위원의 구성을 통해 생활인구정책의 선정

- 사업관리카드에는 생활인구정책에 해당될 수 있는 사업을 모두 포함하였기 때문에 실제 생활인구정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 포함될 수 있음.
-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을 명확히 분류하기 위해 4인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해 80개 사업 중 48개 사업을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으로 최종 확정하도록 함.

○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의 유형화와 타당성 검토

- 생활인구정책의 목표를 기준으로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함.
-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을 유형별 타당성 검토는 통계패키지 SAS를 이용하여 χ^2분석과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수행하도록 함.

02 생활인구의 개념과 부여군의 특징

1. 생활인구의 개념과 목표

○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2조에 의하면,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①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②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 ③ 외국인으로 구분됨.

- 여기서 체류하는 사람은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구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의미함(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 따라서 생활인구정책의 목표는 ① 정주인구, ② 체류인구, ③ 외국인으로 구분됨.

2. 부여군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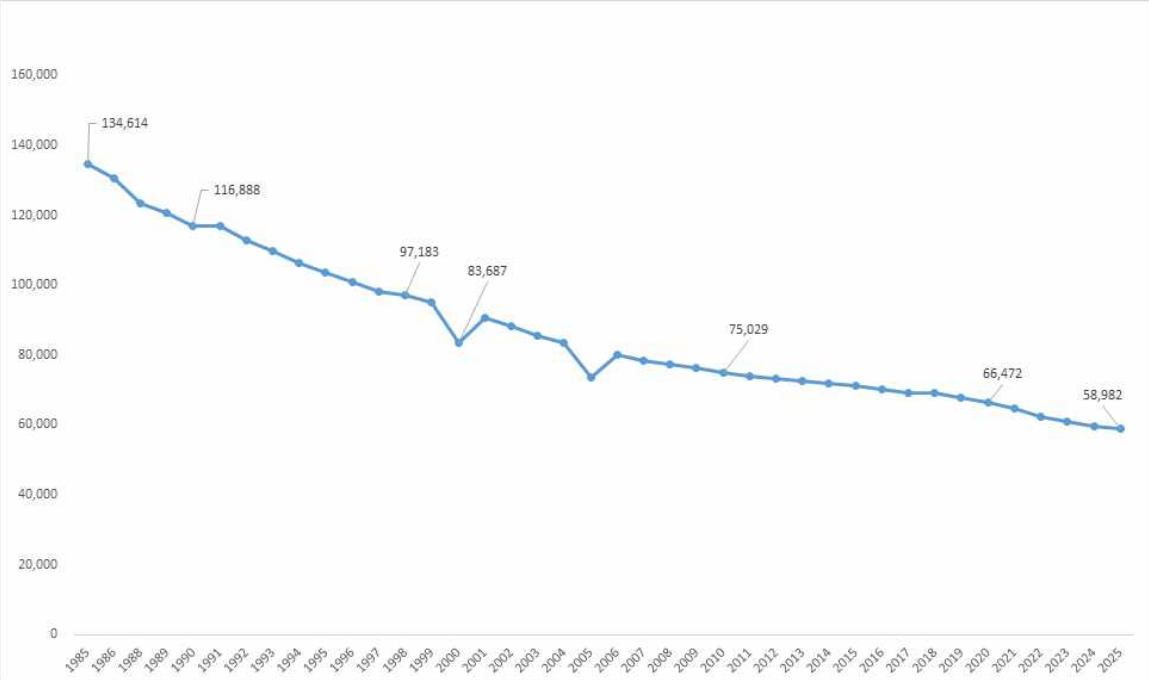
○ 2025년 5월 기준, 부여군의 인구는 총 58,982명임.

- 1985년 134,614명의 43.8% 수준이고, 1997년에 인구가 10만명 이하로 낮아졌음.
- 최근 5년간 자연적 감소는 연평균 700명이고, 사회적 감소는 연평균 500명임.

○ 지난 40년간 부여군의 인구변화를 고려할 때, 부여군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충남도 시군장래인구추계(2022~24)에 의하면, 2042년 부여군의 인구는 53,534명으로 추정됨. 이는 현재 인구보다 5,448명이 작은 규모임(충청남도, 2024).

(단위: 명)



[그림 1] 부여군의 인구변화(1985~2025)

3. 부여군 생활인구 현황

○ 2024년 9월 기준 부여군의 생활인구는 358,676명임.

- 생활인구 중 주민등록인구는 59,823명(16.7%)이고, 체류인구는 296,959명(82.8%), 외국인은 1,894명(0.5%)임.
-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여군의 생활인구는 33위, 주민등록인구는 28위, 체류인구는 36위, 외국인은 28위임.

〈표 1〉 부여군의 생활인구(2024년 9월 기준)

(단위: 명)

계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
358,676 (33위)	59,823 (28위)	296,959 (36위)	1,894 (28위)

자료: 통계청 Big Data 활용(2025년 3월 검색)

○ 주민등록인구에서는 60대와 70대 이상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체류인구는 50대와 4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 부여군의 연령별 생활인구(2024년 9월 기준)

(단위: 명)

구분	계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
계	358,676	59,823	296,959	1,894
20세 미만	51,237	5,921	45,287	29
20대	31,685	3,943	27,129	613
30대	46,004	3,539	41,729	736
40대	61,068	5,792	55,019	257
50대	68,229	9,494	58,602	133
60대	61,666	13,788	47,794	84
70대 이상	38,787	17,346	21,399	42

자료: 통계청 Big Data 활용(2025년 3월 검색)

○ 부여군 체류인구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값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부여군이 백제의 옛 수도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 고대도시임을 고려할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체류인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공주시의 체류인구배수가 6.1배, 재방문율 35.6%, 평균 체류일수 2.9일과 비교할 때 부여군의 체류인구는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됨.

〈표 3〉 부여군 체류인구의 특징(2024년 9월 기준)

구분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부여군
	최대값	최소값	평균	
체류인구배수 (단위: 배)	14.9	2.6	5.9	4.8
재방문율 (단위: %)	55.1	9.9	34.5	31.7
평균 체류일수 (단위: 일)	5.7	2.2	3.1	2.7
평균 체류시간 (단위: 시간)	17.4	9.3	12.3	12.3
평균 숙박일수 (단위: 일)	7.2	2.0	3.3	2.9
타시도 거주자 비중 (단위: %)	93	31.8	70.4	78.6

자료: 통계청 Big Data 활용(2025년 3월 검색)

○ 부여군 체류인구는 296,959명이고, 이들의 체류일수는 총 806,336일임. 따라서 1인당 평균 체류일수는 2.7일임.

〈표 4〉 부여군 체류인구의 체류일수(2024년 9월 기준)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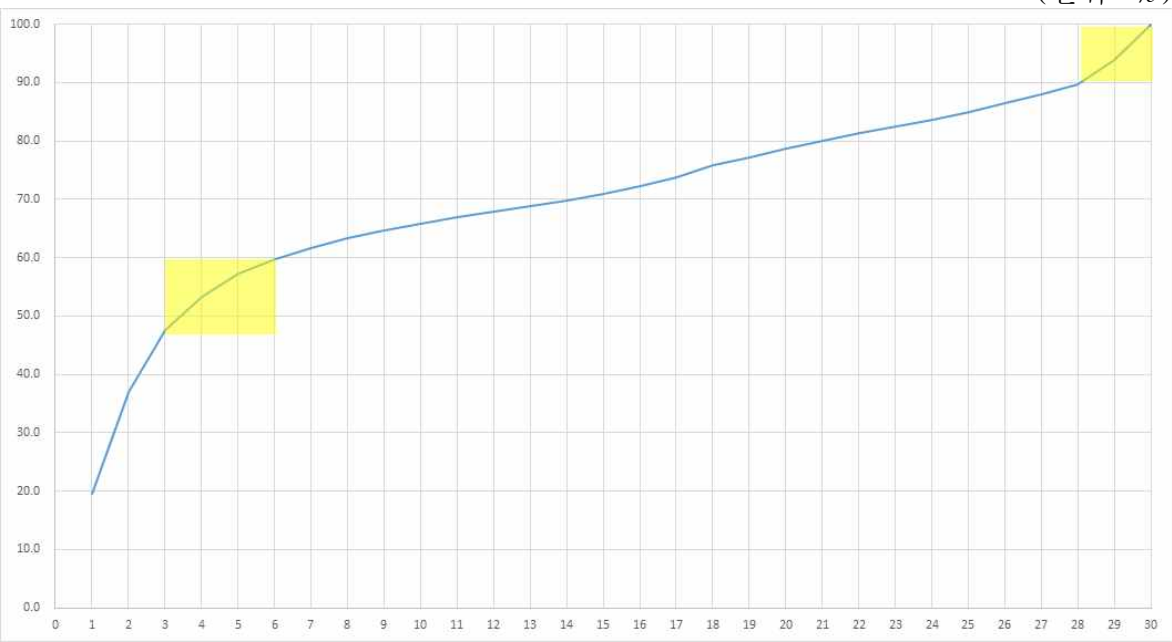
구분	계	20세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계	296,959	45,287	27,129	41,729	55,019	58,602	47,794	21,399
01일	157,885	21,117	13,024	22,203	28,025	31,429	28,333	13,754
02일	70,050	13,119	7,103	10,364	13,301	13,423	9,404	3,335
03일	28,643	6,423	2,598	3,928	5,996	5,121	3,333	1,244
04일	11,558	2,027	1,161	1,513	2,418	2,267	1,611	562
05일	6,324	1,032	660	878	1,231	1,268	915	339
06일	3,422	456	402	451	615	716	548	234
07일	2,176	290	239	260	381	465	394	146
08일	1,613	123	167	206	281	365	327	144
09일	1,209	104	159	133	199	265	243	106
10일	963	68	108	98	173	215	211	90
11일	795	36	81	79	132	177	204	86
12일	655	24	58	65	97	170	161	80
13일	611	13	75	64	109	144	138	68
14일	520	10	53	90	89	120	101	57
15일	611	22	79	98	107	132	110	63
16일	654	24	59	107	132	169	101	61
17일	773	17	63	145	154	208	145	41
18일	855	32	94	128	176	239	131	55
19일	635	22	93	97	121	146	112	45
20일	561	26	75	74	125	126	94	42
21일	523	32	46	78	104	130	91	43
22일	465	27	74	58	81	106	85	34
23일	430	39	63	54	68	98	74	34
24일	393	33	61	50	61	80	69	38
25일	397	25	69	53	63	82	76	29
26일	456	35	80	49	60	98	94	39
27일	488	14	82	50	77	104	89	72
28일	497	16	85	64	88	106	83	54
29일	1,170	30	91	140	205	283	229	191
30일	1,626	47	124	152	351	352	288	312

자료: 통계청 Big Data 활용(2 25년 3월 검색)

❍ 당일 방문이 157,885명으로 전체 체류인구의 53.2%를 차지함. 한편 부여군 체류일수별 누적인원의 비중 보면 3일에서 5일, 그리고 29일에서 기울기 변화가 나타남.

- 따라서 부여군의 체류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3일에서 5일의 체류인구와 30일 이상의 장기 체류인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단위: %)



[그림 2] 부여군 체류일수별 누적 체류인구 비중

❍ 부여군 체류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54.8%이고 여자는 45.2%임. 그리고 내국인은 98.5%이고, 외국인은 1.5%임.

- 반면 체류일수를 기준으로 보면, 남자는 55.8%이고 여자는 44.2%임. 그리고 내국인은 97.7%이고, 외국인은 2.4%임.

❍ 부여군은 체류인구는 주로 내국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고, 여자에 비해서 남자의 체류일수가 많고,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의 체류일수 상대적으로 많음.

- 따라서 부여군의 체류일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상대적으로 체류일수가 낮은 여성과 외국인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표 5〉 부여군 체류인구의 성별과 내외국인(2024년 9월 기준)

(단위: 명, 일, %)

구분	계	성별		내외국인	
		남자	여자	내국인	외국인
체류인원	157,885 (100.0)	86,701 (54.8)	71,185 (45.2)	155,630 (98.5)	2,255 (1.5)
체류일수	806,336 (100.0)	450,281 (55.8)	356,066 (44.2)	787,388 (97.7)	18,954 (2.4)

자료: 통계청 Big Data 활용(2025년 3월 검색)

4. 분석결과의 종합

〈표 6〉 부여군 인구변화의 종합

구분	현재 상황	개선 방안
주민등록인구	지난 40년간 지속적 감소 60대 이상의 높은 비중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체류인구	다른 지역에 비해 체류인구가 작음 50대와 40대가 중심 당일 방문이 가장 높은 비중 차지	체류인구 확대 필요 청년, 여성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추진 필요 3~5일 단기 체류와 30일 이상의 장기 체류 확대 필요

03 생활인구정책의 목록화와 대상사업의 선정

1. 대상사업의 목록화

○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2025년 부여군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생활인구정책과 관련된 사업과 2025년 인구감소대응 실행계획에 포함된 사업 등으로 총 80개를 도출하였음.

○ 도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파악학기 “사업관리카드”를 작성하였음. 사업관리카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7〉 사업관리카드의 주요내용

구분	세부내용	
사업목적	정책목표	정주인구, 체류인구, 외국인
	정책대상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자, 전 연령
사업개요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업분야	출산·가족, 일자리, 정주여건, 인력양성, 문화여가, 돌봄복지, 단기 체류 및 교류, 관광활성화, 귀농귀촌, 기타
	참여대상	지역주민, 외지인, 구분 없음
	사업성격	HW, SW, HW+SW
민간협력		
설정목표 및 향후계획	설정목표	정주인구, 체류인구, 외국인
	향후계획	확대, 유지, 축소, 폐지
담당부서		

주: 사업관리카드에는 세부내용 중 해당 사항을 기입하였음.

2.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1) 선정기준

○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의 선정기준은 ① 적합성, ② 중요성과 효과성의 2단계로 구분하도록 함.

○ 생활인구정책의 적합성 평가
- 해당 사업이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으로 적합한가에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임.
- 생활인구정책으로 적합한 경우는 1로 아닌 경우는 0으로 표시함.

○ 생활인구정책의 중요성 평가
-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으로 해당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5점 척도로 평가하는 항목임.
- 매우 중요하면 5, 중요하면 4, 보통은 3, 중요하지 않으면 2, 전혀 중요하지 않으면 1로 평가함.
- 생활인구정책의 목표의 관점에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평가, 즉 정주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의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중요성을 평가함.

○ 생활인구정책의 효과성 평가
- 해당 사업의 성과가 얼마나 효과적인가를 5점 척도로 평가하는 항목임.
- 매우 효과적이면 5, 효과적이면 4, 보통은 3, 효과적이지 않으면 2, 전혀 효과적이지 않으면 1로 평가함.
- 생활인구정책의 목표의 관점에서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 즉 정주인구, 체류인구, 외국인의 정책목표를 고려하여 효과성을 평가함.

2) 평가방법

○ 평가위원의 구성
- 평가위원은 총 4명으로 구성을 하였고, 이중 3명은 생활인구정책과 관련한 전문

가로, 나머지 1명은 부여군 여건을 잘 알고 있는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하였음.

○ 생활인구정책의 적합성 평가

- 평가위원 중 2명 이상이 생활인구정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은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에서 제외하도록 함.

○ 생활인구정책의 중요성과 효과성 평가

- 생활인구정책의 중요성과 효과성의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을 4가지 형태로 구분하도록 함.
- 4가지 형태 중 중요성과 효과성이 모두 낮은 3구분은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에서 제외하도록 함.

[그림 3]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의 대상사업 선정기준

3. 대상사업의 선정결과

1) 1차 부적합 사업

○ 80개 부여군 생활인구정책 중에서 평가위원 2명 이상이 부적합하게 판단한 사업은 총 15개임.

- 1차적으로 제외된 15개 부적합 사업은 생활인구정책이 아니라 부여군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하거나 특정 목적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특징을 가짐.
- 이들 사업은 생활인구정책에서 제외하고 개별 사업의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표 8〉 1차 부적합 사업 목록(15개)

연번	부서명	사업명
12	문화관광과	정월대보름 축제
17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유치
26	문화유산과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
27	문화유산과	성왕로 경관개선 사업
30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32	문화유산과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33	문화유산과	부여 유물수장고 건립사업
38	교육체육과	전국대회유치
40	사회복지과	장애인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건립
58	도시건축과	부여 규암지구(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
65	경제교통과	굿뜨래페이
66	경제교통과	희망채움일자리
67	경제교통과	지역공동체일자리
69	경제교통과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75	보건소	충청남도 보건의 날 행사

주: 연번은 사업관리카드의 번호임(이하 동일)

2) 2차 선정사업

○ 80개 사업목록 중에서 1차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15개 사업을 제외한 65개 사업을 구분한 결과는 <표 9>와 같음.

- 사업의 구분을 위해 80개 사업의 중요성의 평균이 3.28과 효과성의 평균이 3.00을 기준으로 X축과 Y축을 이동한 사분면 그래프를 이용하였음.
- 중요성과 효과성이 모두 높은 구분1은 36개 사업, 중요성은 낮고 효과성이 높은 구분2는 11개 사업, 중요성과 효과성이 모두 낮은 구분3 사업은 17개 사업, 그리고 중요성은 높고 효과성은 낮은 구분4는 1개 사업임.

〈표 9〉 생활인구정책의 대상사업 수

전체	1차 부적합 사업	2차 선정사업(65개)			
		구분1	구분2	구분3	구분4
80개	15개	36개	11개	17개	1개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여군에서 생활인구정책으로 목록화한 80개 사업 중에서 1차 부적합 사업으로 분류된 15개 사업과 2차에서 구분3으로 분류된 17개 사

업을 제외한 48개 사업을 부여군의 생활인구정책으로 최종 확정하도록 함.

3) 구분별 사업목록

○ 구분1 사업은 부여군의 특징이 반영된 생활인구사업이고, 구분2는 주로 체류인구와 관련된 사업, 구분3은 일반 관광산업, 구분4는 청년 프로그램 사업의 특징을 가짐.

〈표 10〉 구분별 사업목록

구분	연번	부서명	사업명	중요성	효과성	종합
구분1	3	전략사업과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4.00	3.50	3.75
	6	전략사업과	청년기금 조성	3.75	3.25	3.50
	8	홍보교류과	지역상생형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3.75	3.75	3.75
	10	홍보교류과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청소년 교류	3.50	3.00	3.25
	13	문화관광과	부여 서동연꽃축제	3.75	3.50	3.63
	14	문화관광과	제71회 백제문화제	4.75	4.25	4.50
	16	문화관광과	팸투어확대	4.00	4.00	4.00
	21	문화관광과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3.50	3.25	3.38
	24	문화관광과	123사비 공예마을 운영	3.75	3.50	3.63
	29	문화유산과	부여 국가유산 야행	4.50	3.75	4.13
	31	문화유산과	국가유산 활용사업	4.00	3.50	3.75
	34	교육체육과	카누특화도시 조성(균발)	3.75	3.75	3.75
	41	가족행복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여성창업지원센터, 새일여성인턴, 구인구직, 직업교육훈련)	3.50	3.25	3.38
	42	가족행복과	아이돌봄지원	3.50	3.25	3.38
	45	가족행복과	항상 열려있는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3.50	3.25	3.38
	47	농업정책과	부여 스마트농업 패키지 지원체계구축	4.00	3.75	3.88
	48	농업정책과	미래 농업을 선도할 2040세대 육성	4.00	4.00	4.00
	49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3.50	3.50	3.50
	50	농업정책과	농촌 근로자숙소 조성	4.00	4.00	4.00
	51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개발	3.75	3.50	3.63
	52	농업정책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4.25	4.00	4.13
	53	농업정책과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4.00	3.25	3.63
	54	농업정책과	해외농업전문인력양성	3.75	3.50	3.63
	55	굿뜨래경영과	친환경 청년농부 지원사업	4.00	3.25	3.63
	56	굿뜨래경영과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지원	4.00	3.00	3.50
	57	굿뜨래경영과	서울농장 지방소멸대응기금	4.00	3.75	3.88
	64	도시건축과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3.75	3.25	3.50
	68	경제교통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3.75	3.50	3.63
	70	경제교통과	백마강달밤야시장운영	4.00	4.00	4.00
	71	경제교통과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3.75	3.25	3.50

	72	투자유치과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기업·기관유치	3.75	3.25	3.50
	73	투자유치과	은산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건립사업	3.75	3.50	3.63
	76	농업기술센터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활성화	3.50	3.75	3.63
	77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안정정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3.75	3.75	3.75
	78	농업기술센터	백제고도국화축제 개최	3.75	3.25	3.50
	79	농업기술센터	지역자원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3.75	3.50	3.63
구분2	1	종합민원지적과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활성화	3.25	3.00	3.13
	7	전략사업과	우리아이동행마루 조성	3.25	3.00	3.13
	11	문화관광과	연꽃 특화도시 부여 브랜딩	3.25	3.25	3.25
	15	문화관광과	서부내륙권 관광진흥 사업	3.25	3.25	3.25
	28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3.25	3.00	3.13
	35	교육체육과	카누 전국대회유치	3.25	3.00	3.13
	37	교육체육과	파크골프장	3.25	3.25	3.25
	44	가족행복과	국제결혼가정 정착을 위한 특수사업	3.25	3.25	3.25
	46	농업정책과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3.00	3.00	3.00
	59	도시건축과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3.00	3.25	3.13
	62	도시건축과	규암나루 청년임대주택 조성	3.25	3.25	3.25
구분3	4	전략사업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75	2.25	2.50
	5	전략사업과	청년의 날 행사	2.25	2.00	2.13
	9	홍보교류과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3.25	2.75	3.00
	18	문화관광과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사업	3.00	2.75	2.88
	19	문화관광과	금강누정선유길 조성사업	2.75	2.50	2.63
	20	문화관광과	백마강 국제무역항 조성사업	2.75	2.50	2.63
	22	문화관광과	반산 저수지 디지털 테마파크	2.25	2.00	2.13
	23	문화관광과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광자원 개발	2.75	2.50	2.63
	25	문화유산과	부여 송국리유적 방문자센터 건립사업	2.75	2.25	2.50
	36	교육체육과	용선대회	2.75	2.50	2.63
	39	교육체육과	학습동행, 희망을 키우는 평생학습도시	3.00	2.75	2.88
	43	가족행복과	공동육아나눔터	3.00	2.50	2.75
	60	도시건축과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3.00	2.75	2.88
	61	도시건축과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3.00	2.75	2.88
	63	도시건축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3.00	2.75	2.88
	74	보건소	예비 엄마아빠 건강관리	3.00	2.25	2.63
	80	사적관리소	체험,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로 문화관 역량강화	2.25	2.25	2.25
구분4	2	전략사업과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3.50	2.50	3.00

주: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에서 구분3은 제외함.

04 생활인구정책의 유형화와 타당성 검토

1. 생활인구정책의 유형화

○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은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유형화가 가능함. 즉 정주인구사업, 체류인구사업, 외국인사업, 그리고 정주인구와 체류인구를 모두를 위한 사업으로 유형화됨.

○ 2025년 부여군의 생활인구정책으로 최종 선정된 48개 사업 중 정주인구사업은 20개(41.7%), 체류인구사업은 13개(27.1%), 외국인사업은 4개(8.3%), 정주+체류인구사업은 11개(22.9%)임.

– 사업수를 기준으로 할 때, 부여군의 생활인구정책은 정주인구사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11〉 생활인구정책의 유형별 사업수

(단위: 개, %)

전체	정주인구 사업	체류인구 사업	외국인 사업	정주+ 체류인구사업
48 (100.0)	20 (41.7)	13 (27.1)	4 (8.3)	11 (22.9)

○ 정주인구사업은 농업정책과(5개)와 가족행복과(4개), 도시건축과(3개업), 전략사업과(3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표 12〉 정주인구사업의 사업명

연번	부서명	사업명	중요성	효과성	종합
2	전략사업과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3.50	2.50	3.00
6	전략사업과	청년기금 조성	3.75	3.25	3.50
7	전략사업과	우리아이동행마루 조성	3.25	3.00	3.13
41	가족행복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여성창업지원센터, 새일여성인턴, 구인구직, 직업교육훈련)	3.50	3.25	3.38
42	가족행복과	아이돌봄지원	3.50	3.25	3.38
44	가족행복과	국제결혼가정 정착을 위한 특수사업	3.25	3.25	3.25
45	가족행복과	항상 열려있는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3.50	3.25	3.38
46	농업정책과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3.00	3.00	3.00
47	농업정책과	부여 스마트농업 패키지 지원체계구축	4.00	3.75	3.88
48	농업정책과	미래 농업을 선도할 2040세대 육성	4.00	4.00	4.00
52	농업정책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4.25	4.00	4.13
53	농업정책과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4.00	3.25	3.63
55	굿뜨래경영과	친환경 청년농부 지원사업	4.00	3.25	3.63
59	도시건축과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3.00	3.25	3.13
62	도시건축과	규암나루 청년임대주택 조성	3.25	3.25	3.25
64	도시건축과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3.75	3.25	3.50
68	경제교통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3.75	3.50	3.63
72	투자유치과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기업·기관유치	3.75	3.25	3.50
73	투자유치과	은산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건립사업	3.75	3.50	3.63
76	농업기술센터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활성화	3.50	3.75	3.63

○ 체류인구사업은 문화관광과(4개)와 문화유산과(3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표 13〉 체류인구사업의 사업명

연번	부서명	사업명	중요성	효과성	종합
8	홍보교류과	지역상생형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3.75	3.75	3.75
10	홍보교류과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청소년 교류	3.50	3.00	3.25
13	문화관광과	부여 서동연꽃축제	3.75	3.50	3.63
14	문화관광과	제71회 백제문화제	4.75	4.25	4.50
15	문화관광과	서부내륙권 관광진흥 사업	3.25	3.25	3.25
16	문화관광과	팸투어확대	4.00	4.00	4.00
21	문화관광과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3.50	3.25	3.38
28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3.25	3.00	3.13
29	문화유산과	부여 국가유산 야행	4.50	3.75	4.13
31	문화유산과	국가유산 활용사업	4.00	3.50	3.75
34	교육체육과	카누특화도시 조성(균발)	3.75	3.75	3.75
35	교육체육과	카누 전국대회유치	3.25	3.00	3.13
57	굿뜨래경영과	서울농장 지방소멸대응기금	4.00	3.75	3.88

○ 외국인사업은 농업정책과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표 14〉 외국인사업의 사업명

연번	부서명	사업명	중요성	효과성	종합
49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3.50	3.50	3.50
50	농업정책과	농촌 근로자숙소 조성	4.00	4.00	4.00
51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개발	3.75	3.50	3.63
54	농업정책과	해외농업전문인력양성	3.75	3.50	3.63

○ 정주+체류인구사업은 농업기술센터(3개 사업)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표 15〉 정주+체류인구사업의 사업명

연번	부서명	사업명	중요성	효과성	종합
1	종합민원지적과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활성화	3.25	3.00	3.13
3	전략사업과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4.00	3.50	3.75
11	문화관광과	연꽃 특화도시 부여 브랜딩	3.25	3.25	3.25
24	문화관광과	123사비 공예마을 운영	3.75	3.50	3.63
37	교육체육과	파크골프장	3.25	3.25	3.25
56	굿뜨래경영과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지원	4.00	3.00	3.50
70	경제교통과	백마강달밤야시장운영	4.00	4.00	4.00
71	경제교통과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3.75	3.25	3.50
77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안정정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3.75	3.75	3.75
78	농업기술센터	백제고도국화축제 개최	3.75	3.25	3.50
79	농업기술센터	지역자원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3.75	3.50	3.63

2. 사업비와 사업기간

○ 유형별 사업비를 기준으로 보면, 정주인구사업은 169,232백만원(72.8%), 체류인구사업은 46,649백만원(20.1%), 외국인사업은 9,511백만원(4.1%), 정주+체류인구사업은 7,1690백만원(3.1%)임.

○ 그리고 사업당 사업비를 살펴보면, 정주인구사업은 사업당 8,462백만원으로 정주+체류인구사업에 비해 13배, 정주인구사업에 비해 2.4배 많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은 정주인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체류인구사업과 외국인사업이 상대적으로 강조될 필요성이 있음.

〈표 16〉 사업비와 사업규모

(단위: 개, 백만원, %)

구분	사업수	사업비	사업당 사업비
전체	48(100.0)	232,560(100.0)	4,845
정주인구사업	20(41.7)	169,232(72.8)	8,462
체류인구사업	13(27.1)	46,649(20.1)	3,588
외국인사업	4(8.3)	9,511(4.1)	2,378
정주+체류인구사업	11(22.9)	7,169(3.1)	652

○ 부여군 생활인구정책 중 30개 사업(62.5%)은 매년 수행하는 계속사업으로 나타남. 이는 4가지 유형별로 통계적 차이가 없음.

– 즉 불과 18개(37.5%) 사업만이 사업기간이 있는 사업으로 나타남. 이는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이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생활인구정책에 대한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사업내용을 보완하거나 사업을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

〈표 17〉 계속사업 여부

(단위: 개, %)

구분	전체	정주인구 사업	체류인구 사업	외국인 사업	정주+ 체류인구사업
전체	48 (100.0)	20 (100.0)	13 (100.0)	4 (100.0)	11 (100.0)
계속사업	30 (62.5)	11 (55.0)	8 (61.5)	2 (50.0)	9 (81.8)
비 계속사업	18 (37.5)	9 (45.0)	5 (38.5)	2 (50.0)	2 (18.2)

χ^2=2.5033, df=3, prob=0.4747

○ 한편 사업기간이 있는 18개 사업의 평균 사업기간은 3.67년임. 그리고 이는 4가지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기간의 통계적 차이가 없음.

–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사업별 평균 사업기간이 3.67년인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일부 사업은 사업기간이 4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사업기간이 있는 사업의 경우, 최대 5년 이내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표 18〉 평균 사업기간

(단위: 년)

변수	전체	정주인구 사업	체류인구 사업	외국인 사업	정주+체류인구사업	F값 (prob)
사업기간	3.67	4.33	3.60	2.50	2.00	1.03 (0.4091)
최소값	1	2	1	2	2	
최대값	8	8	6	3	3	

3. 설정목표와 목표의 일치성

○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의 설정목표는 정주인구 68,248명이고, 체류인구는 2,230,199명이며, 외국인은 1,972명임.

– 개별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를 모두 합산하면, 부여군의 생활인구는 230만명 정도임. 이는 2025년 부여군 생활인구정책 목표인 10만명의 23배에 해당됨.

–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개별 사업에서 제시하는 생활인구가 과대추정 되었거나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표 19〉 설정목표

(단위: 명)

구분	생활인구	정주인구	체류인구	외국인
전체	2,300,339	68,248	2,230,119	1,972
정주인구사업	6,835	4,685	2,150	0
체류인구사업	1,979,999	2	1,978,857	1,140
외국인사업	432	0	120	312
정주+체류인구사업	313,073	63,561	248,992	520

○ 따라서 개별 사업의 성과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개별 사업을 사후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통계청 Big Data를 활용하여 현실치와 목표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생활인구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체류인구의 개념을 고려하여 체류인구의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유형별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정주인구사업은 정주인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체류인구사업, 외국인사업, 정주+체류인구사업은 사업유형과 정책목표가 일치하는 않음.
– 따라서 체류인구사업, 외국인사업, 정주+체류인구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사업내용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체류인구사업과 외국인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은 외국인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표 20〉 목표의 일치성

(단위: 개, %)

구분	전체	정주인구 사업	체류인구 사업	외국인 사업	정주+ 체류인구사업
전체	48 (100.0)	20 (100.0)	13 (100.0)	4 (100.0)	11 (100.0)
정주인구	21 (43.8)	18 (90.0)	0 (0.0)	0 (0.0)	3 (27.3)
체류인구	15 (31.3)	1 (5.0)	8 (61.5)	1 (25.0)	5 (45.5)
외국인	3 (6.3)	0 (0.0)	0 (0.0)	3 (75.0)	0 (0.0)
정주 +체류인구	4 (8.3)	1 (5.0)	2 (15.4)	0 (0.0)	1 (9.1)
체류인구 +외국인	3 (6.3)	0 (0.0)	3 (23.1)	0 (0.0)	0 (0.0)
정주+체류+외국인	2 (4.2)	0 (0.0)	0 (0.0)	0 (0.0)	2 (18.2)

χ^2=76.0727, df=15, prob=0.0001

○ 생활인구정책의 유형과 정책목표가 불일치하는 사업은 모두 19개 사업이고, 세부 사업명은 다음과 같음.
– 정주인구사업에서 정책목표가 불일치하는 사업은 모두 2개로임. 불일치하는 사업은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기업·기관유치임.
– 체류인구사업사업에서 정책목표가 불일치하는 사업은 모두 5개임. 불일치하는 사

업은 세계유산 탐방거점 센터 건립, 부여 국가유산 야행, 국가유산 활용사업, 카누특화도시 조성, 서울농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임.

- 외국인사업에서 정책목표가 불일치하는 사업은 1개로 해외농업전문인력사업임.
- 정주+체류인구사업에서 정책목표가 불일치하는 사업은 11개 모두 사업임. 즉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활성화, 청년세어하우스 운영, 연꽃 특화도시 부여 브랜딩, 123사비 공예마을 운영, 파크골프장,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지원, 백마강달밤야시장운영,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귀농귀촌인 안정정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백제고도국화축제 개최가 모두 정책목표와 불일치함.

○ 이상을 종합해 보면, 정주인구사업은 비교적 정책목표의 일치성이 높은 반면, 그 외 사업은 정책목표의 일치성이 낮음. 특히 정주+체류인구사업의 경우 11개 모두 정책목표의 일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개별 부서에서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생활인구정책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임.

- 우선 해당 사업의 유형과 목표가 불일치하는 19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의 정책목표를 정확히 파악해 정책목표에 맞게끔 사업내용을 설정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생활인구정책의 목표가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정책목표가 무엇인지를 보다 세밀하게 확인하고 사업내용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정책대상과 추진부서

○ 유형별 정책대상을 살펴보면, 정주인구사업과 외국인사업은 청년을 중심으로, 체류인구사업과 정주+체류인구사업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생활인구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정 계층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부여군의 생활인구정책은 아동과 청년을 보다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1〉 정책대상

(단위: 개, %)

구분	전체	정주인구 사업	체류인구 사업	외국인 사업	정주+ 체류인구사업
전체	48 (100.0)	20 (100.0)	13 (100.0)	4 (100.0)	11 (100.0)
아동	3 (6.3)	3 (15.0)	0 (0.0)	0 (0.0)	0 (0.0)
청년	16 (33.3)	10 (50.0)	0 (0.0)	4 (100.0)	2 (18.2)
중장년	2 (4.2)	1 (5.0)	0 (0.0)	0 (0.0)	1 (9.1)
고령자	1 (2.1)	1 (5.0)	0 (0.0)	0 (0.0)	0 (0.0)
전 연령	26 (54.2)	5 (25.0)	13 (100.0)	0 (0.0)	8 (72.7)

χ^2=30.1217, df=12, prob=0.0027

○ 한편 유형별 참여대상을 살펴보면, 정주인구사업은 주로 지역주민을, 외국인 사업은 외지인을, 그리고 체류인구사업과 정주+체류인구사업은 지역주민과 외지인을 참여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향후 정주인구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체류인구사업은 외지인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표 22〉 참여대상

(단위: 개, %)

구분	전체	정주인구 사업	체류인구 사업	외국인 사업	정주+ 체류인구사업
전체	48 (100.0)	20 (100.0)	13 (100.0)	4 (100.0)	11 (100.0)
지역주민	14 (29.2)	13 (65.0)	0 (0.0)	0 (0.0)	1 (9.1)
외지인	8 (16.7)	0 (0.0)	3 (23.1)	4 (100.0)	1 (9.1)
지역주민+ 외지인	26 (54.2)	7 (35.0)	10 (76.9)	0 (0.0)	9 (81.8)

χ^2=42.3011, df=6, prob=0.0001

○ 유형별 추진부서를 살펴보면, 정주인구사업은 농업정책과와 가족행복과가, 그리고 체류인구사업은 문화관광과와 문화유산과가, 외국인사업은 농업정책과가 중심이 되어 수행하고 있음. 그리고 정주+체류인구사업은 농업기술센터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음.

- 부여군의 20개 과와 2개 사업소 중 생활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서는 13개임. 이를 감안할 때, 부서별로 생활인구정책을 특성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다만 부여군 전체가 생활인구정책을 중요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생활인구정책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표 23〉 추진부서

(단위: 개, %)

구분	전체	정주인구 사업	체류인구 사업	외국인 사업	정주+ 체류인구사업
전체	48 (100.0)	20 (100.0)	13 (100.0)	4 (100.0)	11 (100.0)
가족행복과	4 (8.3)	4 (20.0)	0 (0.0)	0 (0.0)	0 (0.0)
경제교통과	3 (6.3)	1 (5.0)	0 (0.0)	0 (0.0)	2 (18.2)
교육체육과	3 (6.3)	0 (0.0)	2 (15.4)	0 (0.0)	1 (9.1)
굿뜨래경영과	3 (6.3)	1 (5.0)	1 (7.7)	0 (0.0)	1 (9.1)
농업기술센터	4 (8.3)	1 (5.0)	0 (0.0)	0 (0.0)	3 (27.3)
농업정책과	9 (18.8)	5 (25.0)	0 (0.0)	4 (100.0)	0 (0.0)
도시건축과	3 (6.3)	3 (15.0)	0 (0.0)	0 (0.0)	0 (0.0)
문화관광과	7 (14.6)	0 (0.0)	5 (38.5)	0 (0.0)	2 (18.2)
문화유산과	3 (6.3)	0 (0.0)	3 (23.1)	0 (0.0)	0 (0.0)
전략사업과	4 (8.3)	3 (15.0)	0 (0.0)	0 (0.0)	1 (9.1)
종합민원지적과	1 (2.1)	0 (0.0)	0 (0.0)	0 (0.0)	1 (9.1)
투자유치과	2 (4.2)	2 (10.0)	0 (0.0)	0 (0.0)	0 (0.0)
홍보교류과	2 (4.2)	0 (0.0)	2 (15.4)	0 (0.0)	0 (0.0)

χ^2=73.4957, df=36, prob=0.0002

5. 사업분야와 사업위치

○ 유형별 사업분야를 살펴보면, 정주인구사업은 주로 정주여건을 중심으로, 체류인구사업과 정주+체류인구사업은 관광활성화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외국인 사업은 일자리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한편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을 사업분야별로 살펴보면, 관광활성화가 13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일자리와 정주여건이 각각 7개 사업임.
- 상대적으로 정주여건에서는 돌봄복지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체류인구에서는 단기 체류 및 교류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표 24〉 사업분야

(단위: 개, %)

구분	전체	정주인구 사업	체류인구 사업	외국인 사업	정주+ 체류인구사업
전체	48 (100.0)	20 (100.0)	13 (100.0)	4 (100.0)	11 (100.0)
일자리	7 (14.6)	4 (20.0)	0 (0.0)	2 (50.0)	1 (9.1)
정주여건	7 (14.6)	6 (30.0)	0 (0.0)	1 (25.0)	0 (0.0)
인력양성	5 (10.4)	3 (15.0)	0 (0.0)	1 (25.0)	1 (9.1)
문화여가	4 (8.3)	2 (10.0)	0 (0.0)	0 (0.0)	2 (18.2)
돌봄복지	5 (10.4)	5 (25.0)	0 (0.0)	0 (0.0)	0 (0.0)
단기 체류 및 교류	4 (8.3)	0 (0.0)	2 (15.4)	0 (0.0)	2 (18.2)
관광활성화	13 (27.1)	0 (0.0)	9 (69.2)	0 (0.0)	4 (36.4)
귀농귀촌	1 (2.1)	0 (0.0)	0 (0.0)	0 (0.0)	1 (9.1)
기타	2 (4.2)	0 (0.0)	2 (15.4)	0 (0.0)	0 (0.0)

χ^2=53.5605, df=24, prob=0.0005

○ 한편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은 대부분 부여군 전체 혹은 부여읍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음.

- 부여군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공간적 위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생활인구정책과 관련한 정책은 가급적 부여읍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최근 새롭게 성장하는 규암면의 경우에는 특정 목적, 예컨대 체류인구를 중심으로 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표 25〉 사업위치

(단위: 개, %)

구분	전체	정주인구 사업	체류인구 사업	외국인 사업	정주+ 체류인구사업
전체	48 (100.0)	20 (100.0)	13 (100.0)	4 (100.0)	11 (100.0)
전지역	19 (39.6)	8 (40.0)	5 (38.5)	3 (75.0)	3 (27.3)
부여읍	15 (31.3)	3 (15.0)	5 (38.5)	1 (25.0)	6 (54.6)
규암면	9 (18.8)	6 (30.0)	2 (15.4)	0 (0.0)	1 (9.1)
은산면	2 (4.2)	2 (10.0)	0 (0.0)	0 (0.0)	0 (0.0)
홍산면	1 (2.1)	1 (5.0)	0 (0.0)	0 (0.0)	0 (0.0)
남면	1 (2.1)	0 (0.0)	0 (0.0)	0 (0.0)	1 (9.1)
장암면	1 (2.1)	0 (0.0)	1 (7.7)	0 (0.0)	0 (0.0)

χ^2=18.5421, df=18, prob=0.4205

6. 사업성격과 민관협력

○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은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이 41.7%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업이 33.3%임. 반면 하드웨어 사업은 25.0%에 불과함.

– 따라서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은 기존의 HW 중심에서 탈피한 것으로 판단되고, SW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26〉 사업성격

(단위: 개, %)

구분	전체	정주인구 사업	체류인구 사업	외국인 사업	정주+ 체류인구사업
전체	48 (100.0)	20 (100.0)	13 (100.0)	4 (100.0)	11 (100.0)
HW	12 (25.0)	7 (35.0)	2 (15.4)	1 (25.0)	2 (18.2)
SW	20 (41.7)	6 (30.0)	8 (61.5)	2 (50.0)	4 (36.4)
HW+SW	16 (33.3)	7 (35.0)	3 (23.1)	1 (25.0)	5 (45.5)

χ^2=4.5067, df=6, prob=0.6084

○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은 민관협력이 없이 주로 부여군이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주인구사업에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 않기 때문임.

- 그러나 체류인구사업은 관내 단체 및 대외 MOU로, 외국인사업은 대외 MOU, 통해, 그리고 정주+체류인구사업은 관내 단체와 민관협력을 하고 있음.
-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생활인구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내 단체 및 대외 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매우 큼.

〈표 27〉 민관협력

(단위: 개, %)

구분	전체	정주인구 사업	체류인구 사업	외국인 사업	정주+ 체류인구사업
전체	48 (100.0)	20 (100.0)	13 (100.0)	4 (100.0)	11 (100.0)
관내 단체	10 (20.8)	2 (10.0)	2 (15.4)	0 (0.0)	6 (54.6)
대외 MOU	3 (6.3)	0 (0.0)	2 (15.4)	1 (25.0)	0 (0.0)
민간위탁	3 (6.3)	0 (0.0)	1 (7.7)	0 (0.0)	2 (18.2)
없음	32 (66.7)	18 (90.0)	8 (61.5)	3 (75.0)	3 (27.3)

χ^2=22.4049, df=9, prob=0.0077

7. 향후계획

○ 부여군의 생활인구정책 중 향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은 26개(54.2%)이고, 유지하고 하는 사업은 21개(43.8%)임. 반면 폐지할 사업은 1개에 불과함.

- 현재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은 정주인구사업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임. 동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사업으로 2026년부터 종료하기로 한 사업임.
-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생활인구정책의 구조변화를 위해서 매년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의 확대 및 폐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표 28〉 향후계획

(단위: 개, %)

구분	전체	정주인구 사업	체류인구 사업	외국인 사업	정주+ 체류인구사업
전체	48 (100.0)	20 (100.0)	13 (100.0)	4 (100.0)	11 (100.0)
확대	26 (54.2)	11 (55.0)	5 (38.5)	4 (100.0)	6 (54.6)
유지	21 (43.8)	8 (40.0)	8 (61.5)	0 (0.0)	5 (45.5)
폐지	1 (2.1)	1 (5.0)	0 (0.0)	0 (0.0)	0 (0.0)

χ^2=6.3079, df=6, prob=0.3896

〈표 29〉 향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26개)

연번	부서명	사업명	유형
2	전략사업과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정주인구사업
6	전략사업과	청년기금 조성	
7	전략사업과	우리아이동행마루 조성	
41	가족행복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여성창업지원센터, 새일여성인턴, 구인구직, 직업교육훈련)	
42	가족행복과	아이돌봄지원	
47	농업정책과	부여 스마트농업 패키지 지원체계구축	
48	농업정책과	미래 농업을 선도할 2040세대 육성	
52	농업정책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53	농업정책과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62	도시건축과	규암나루 청년임대주택 조성	
72	투자유치과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기업·기관유치	
13	문화관광과	부여 서동연꽃축제	체류인구사업
14	문화관광과	제71회 백제문화제	
21	문화관광과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34	교육체육과	카누특화도시 조성(균발)	
57	굿뜨래경영과	서울농장 지방소멸대응기금	

〈표 29〉 향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26개)(계속)

연번	부서명	사업명	유형
49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외국인사업
50	농업정책과	농촌 근로자숙소 조성	
51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개발	
54	농업정책과	해외농업전문인력양성	

8. 분석결과의 종합

〈표 30〉 부여군 생활인구정책 타당성 검토의 종합

구분	현재 상황	개선 방안
사업유형	정주인구사업, 체류인구사업, 외국인사업, 정주+체류인구사업으로 유형화됨. 정주인구사업이 중심	체류인구사업과 외국인사업 강조 필요
사업비	정주인구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의 72.8%	체류인구사업과 외국인사업 사업비 확보 필요
사업기간	62.5%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 확대, 유지, 폐지 필요
설정목표	과대추정 및 목표설정의 근거 부족	현재 생활인구를 바탕으로 한 목표설정
목표의 일치성	정주인구사업은 목표와 일치하지만, 다른 유형은 사업유형과 목적이 불일치함.	체류인구사업, 외국인사업, 정주+체류인구사업의 목표일치성 제고 필요
정책대상	정주인구사업과 외국인사업은 청년 중심, 그 외 유형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추진	아동과 청년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된 정책 추진 필요
참여대상	정주인구사업은 지역주민, 외국인사업은 외국인, 그 외 유형은 지역주민과 외지인이 참여대상	정주인구사업은 지역주민으로 한정 필요 그 외 사업은 외지인 중심으로 추진 필요
추진부서	정주인구사업은 농업정책과, 가족행복과, 체류인구사업은 문화관광과와 문화유산과, 외국인사업은 농업정책과, 정주+체류인구사업은 농업기술센터가 중심	부서별 특징을 반영해 특성화된 사업유형 중심으로 추진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생활인구정책 홍보 강화
사업분야	정주인구사업은 정주여건 중심, 외국인사업은 일자리 중심, 그 외 유형은 관광활성화 중심으로 추진 중	정주인구사업에서는 돌봄복지, 체류인구사업에서는 단기 체류 및 교류 강화 필요
사업위치	특정한 공간이 없거나 부여읍 중심으로 추진	가급적 부여읍을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 필요
사업성격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추진	
민관협력	부여군이 중심이 되어 단독 추진	관내 단체 및 대외 기관과 협력 강화 필요
향후계획	폐지 예정인 사업은 1개에 불과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의 확대 및 폐지 판단 필요

05 결론 및 개선방안

1. 연구결과의 종합

○ 본 연구의 목적은 부여군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인구정책을 유형화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향후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음.

○ 부여군은 지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고, 고령화율이 높음. 이러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부여군의 경우, 기존의 인구개념에서 탈피한 생활인구가 매우 중요함.

- 그러나 부여군의 체류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당일 방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현재 부여군은 80개의 생활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인구정책에 해당되는 것은 48개로 판단됨. 이를 생활인구정책은 정주인구사업, 체류인구사업, 외국인사업, 정주+체류인구사업으로 유형화됨.

○ 48개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의 실태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사업유형과 사업기간)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은 정주인구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은 계속사업임.
- (설정목표와 목표의 일치성) 개별 사업의 설정목표가 과대 추정되었고, 목표설정의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한편 정주인구사업은 목표와 일치하지만, 그

외 사업유형은 목표와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 (정책대상과 추진부서) 정주인구사업과 외국인사업은 청년 중심이고, 그 외 유형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정주인구사업의 참여대상은 지역주민, 외국인사업은 외국인, 그리고 그 외 유형은 지역주민과 외지인이 참여대상임. 그리고 정주인구사업의 추진부서는 농업정책과와 가족행복과, 체류인구사업은 문화관광과와 문화유산과, 외국인사업은 농업정책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업분야 및 사업위치) 정주인구사업의 사업분야는 정주여건, 외국인사업은 일자리, 그 외 유형은 관광활성화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위치는 특정한 공간이 없거나 부여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 (사업성격 및 민관협력)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민관협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계획) 48개 생활인구정책 중 향후 확대 예정인 사업인 26개이지만, 폐지 예정인 사업은 1개에 불과한 실정임.

2. 향후 개선방안

○ 부여군의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청년, 여성, 외국인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이와 더불어 3~5일 단기 체류와 30일 이상의 장기 체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업유형)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은 기존 정주인구사업 중심에서 탈피하여 체류인구사업과 외국인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할 것임.
- (사업기간)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은 사후평가를 통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을 폐지하고, 지역특성과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사업발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설정목표 및 목표의 일치성) 부여군의 현재 생활인구를 기반으로 한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체류인구사업, 외국인사업, 정주+체류인구사업의 목표 일치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임.
- (정책대상과 참여대상) 부여군의 생활인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아동과 청년

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그리고 정주인구사업은 지역주민으로 한정하고, 그 외 사업은 외지인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추진부서) 부서별 특징을 고려하여 특성화된 사업유형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생활인구정책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업분야) 정주인구사업에서는 돌봄복지, 그리고 체류인구사업에서는 단기 체류 및 교류강화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사업위치)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은 가급적 부여읍을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민관협력) 부여군의 독자적 정책 수행에서 탈피하여 관내 단체 및 대외 기관과 협력적 형태로 생활인구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향후계획) 부여군 생활인구정책 관점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한 후 사업의 확대, 유지, 폐지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부표〉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의 전체 목록

연번	부서명	사업명	생활인구정책 여부
1	종합민원지적과	부여군 드론교육체험센터 운영활성화	
2	전략사업과	청년센터 프로그램 운영	
3	전략사업과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4	전략사업과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제외
5	전략사업과	청년의 날 행사	제외
6	전략사업과	청년기금 조성	
7	전략사업과	우리아이동행마루 조성	
8	홍보교류과	지역상생형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9	홍보교류과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제외
10	홍보교류과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국내외 청소년 교류	
11	문화관광과	연꽃 특화도시 부여 브랜딩	
12	문화관광과	정월대보름 축제	제외
13	문화관광과	부여 서동연꽃축제	
14	문화관광과	제71회 백제문화제	
15	문화관광과	서부내륙권 관광진흥 사업	
16	문화관광과	팸투어확대	
17	문화관광과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유치	제외
18	문화관광과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사업	제외
19	문화관광과	금강누정선유길 조성사업	제외
20	문화관광과	백마강 국제무역항 조성사업	제외
21	문화관광과	금강권 역사문화관광 플랫폼 구축	
22	문화관광과	반산 저수지 디지털 테마파크	제외
23	문화관광과	수리바위 캠핑정원 관광자원 개발	제외
24	문화관광과	123사비 공예마을 운영	
25	문화유산과	부여 송국리유적 방문자센터 건립사업	제외
26	문화유산과	백제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	제외
27	문화유산과	성왕로 경관개선 사업	제외
28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29	문화유산과	부여 국가유산 야행	
30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등재 10주년 기념행사	제외
31	문화유산과	국가유산 활용사업	
32	문화유산과	피너클 어워드 한국대회	제외
33	문화유산과	부여 유물수장고 건립사업	제외
34	교육체육과	카누특화도시 조성(균발)	
35	교육체육과	카누 전국대회유치	
36	교육체육과	용선대회	제외
37	교육체육과	파크골프장	
38	교육체육과	전국대회유치	제외
39	교육체육과	학습동행, 희망을 키우는 평생학습도시	제외
40	사회복지과	장애인 단기+주간(복합형) 보호시설 건립	제외
41	가족행복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여성창업지원센터, 새일여성인턴, 구인구직, 직업교육훈련)	
42	가족행복과	아이돌봄지원	

〈부표〉 부여군 생활인구정책의 전체 목록(계속)

연번	부서명	사업명	생활인구정책 여부
43	가족행복과	공동육아나눔터	제외
44	가족행복과	국제결혼가정 정착을 위한 특수사업	
45	가족행복과	항상 열려있는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46	농업정책과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	
47	농업정책과	부여 스마트농업 패키지 지원체계구축	
48	농업정책과	미래 농업을 선도할 2040세대 육성	
49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50	농업정책과	농촌 근로자숙소 조성	
51	농업정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시스템 개발	
52	농업정책과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53	농업정책과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	
54	농업정책과	해외농업전문인력양성	
55	굿뜨래경영과	친환경 청년농부 지원사업	
56	굿뜨래경영과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지원	
57	굿뜨래경영과	서울농장 지방소멸대응기금	
58	도시건축과	부여 규암지구(공동주택) 도시개발사업	제외
59	도시건축과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60	도시건축과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외
61	도시건축과	소부리 커뮤니티케어센터	제외
62	도시건축과	규암나루 청년임대주택 조성	
63	도시건축과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제외
64	도시건축과	충남형 농촌리브투게더	
65	경제교통과	굿뜨래페이	제외
66	경제교통과	희망채움일자리	제외
67	경제교통과	지역공동체일자리	제외
68	경제교통과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69	경제교통과	취업자격증 취득지원	제외
70	경제교통과	백마강달밤야시장운영	
71	경제교통과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72	투자유치과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기업·기관유치	
73	투자유치과	은산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건립사업	
74	보건소	예비 엄마아빠 건강관리	제외
75	보건소	충청남도 보건의 날 행사	제외
76	농업기술센터	스마트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활성화	
77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안정정착을 위한 지원센터 운영	
78	농업기술센터	백제고도국화축제 개최	
79	농업기술센터	지역자원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80	사적관리소	체험,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로 문화관 역량강화	제외

참고문헌

부여군(2025),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여군(2025), 부여군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관리카드.
충청남도(2024), 2022~2024년 충청남도 시군 장래인구추계 분석 보고서.
행정안전부(2024), 저출생·지방소멸 위기대응 위해 지방교부세 역할 확대·강화한다, 보도 자료(2024. 11. 1)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